



유가족 배신

새정치는 아예 새누리과 합당해라

공무원연금 방어해야
다른 노동자 조건
방어에도 좋다 ▶ 2~3면



홍콩 시위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점거에 나서다

▶ 16면

세월호 참사
또다시 배신당한
유가족

4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오늘날의
계급투쟁

8~9면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폭격
또다시
제국주의 전쟁

14~15면

민주노동
직선제와 좌파

7면

“독일 모델”의
문제점

11면

누구의 말일까요?

“암 덩어리를 제거하겠다”
“죽음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연합 세
력을 구축할 것이다”
조지 W 부시가 빙의된 버락 오바마

“잘못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
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법무부장관 황교안)
“[재벌 사면에]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
은 것 같다. 부정적인 여론이 어디 있
나.”(경제부총리 최경환)
유전무죄 무전유죄 합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은 ... 소련에
서 내려온 지령”
KBS 이사장 이인호

“우리는 부자 증세를 했다.”
“서민보다는 중산층과 고소득층 담뱃
세 부담이 더 많다”
“서민들이 담배 소비량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서 세 부담도 많지 않다.”
새누리당 나성민

“생계 목적이 아니라 경험이나 학비 마
련 목적으로 일하는 청소년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사업주를 처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새누리당 충남도의원 김종필

Q. 공무원연금 축소는 공적연금 무력
화를 통한 재벌 보험사 주머니만 채우
는 ‘연금 민영화’ 아니냐는 비판이 있
다.
A. “절대 아니다. (연금개편으로 공무
원들이) 연금을 더 내게 되기 때문에
민영보험에 가입할 여력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이한구

“만일 결혼을 하려는데, 부모가 성격
나쁜 사람, 지저분한 사람 등 미리 3명
을 정해 놓고 이 중에서 선택하라고 합
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홍콩 민주화 시위 참가자

“여성과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해외 구호 사업을 통한 세계평화 발전
에 노력해 왔다.”
대한적십자사가
5년간 적십자 회비를 낸 적 없는 김성주를
총재 후보로 선출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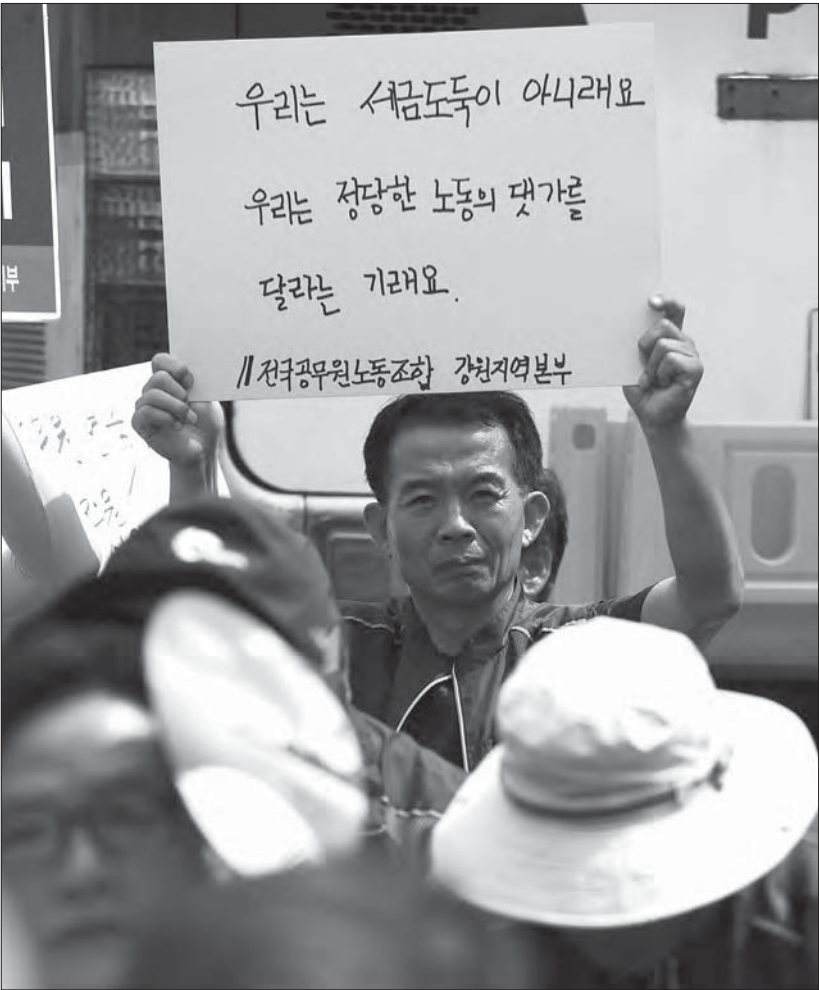
“이 땅에서 약자의 서러움과 눈물을
닦아 주는 일이 이렇게도 힘든 것인지
...”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아함 후 트위터에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인문학적 상상
력은 고사하고 지독한 반기업 정서에
물든 인문계 졸업생들에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한다. 반시장주
의, 반자본주의를 인문학으로 위장하
는 강남좌파식 교수들이 판을 치니 당
연한 결과”
〈한국경제〉사설
“인문계 졸업생 출대 이유 아직도 모르나”,
색깔론으로 대학구조조정 부채질?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박천석, 최미진

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
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낸
후, 정부가 연금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당
정청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미 올해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공무
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을 포
함시켰고, 안전행정부도 최근 “연금
학회 제시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단
고 밝힌 것을 보면 정부안도 공무원연
금을 상당히 공격하는 내용이 될 공산
이 크다.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
는 대신, 공무원의 낮은 퇴직금을 보
전하는 방식’을 내놔다. 그러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 지상 과제인 정부
가 연금 삭감액만큼 퇴직금을 보전해
줄 리가 없다. 어디까지나 공무원 노
동자들에게 연금 삭감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삭감 대신
퇴직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적
연금 시장을 활성화해 민간 보험사들
의 배를 불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민간 보험사를 배만 불리는 ‘연금 민영화’ 시도,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하라.

것은 노동자의 노후를 시장의 불안정
성에 맡기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공격
하며 공무원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
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

에 공무원연금을 깎아야 한다고 말한
다. 그런데 왜 ‘용돈 연금’으로 전략한
국민연금 수준에 공무원연금을 맞춰
야 하는가?
국민연금은 이미 여러 차례 개악
으로 훼손돼,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이 20퍼센트에 못 미친다. 이것은
2040년이 돼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2013년에 국민연금을 받
은 사람 중 10만~20만 원을 수급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1백만 원 이상을
수급한 사람은 겨우 1.2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오히
려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삭
감을 시도하면서 국민연금의 추가 개
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경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더 내고 그대
로 받는’ 국민연금 개악안을 제시했다.
한국연금학회의 전 회장 김용하는 TV
토론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만 있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도 문제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다. 다 줄여
나가야 된다” 하고 속내를 드러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전체 공적연금
의 방어·개선이라는 맥락에서 공무
원연금 개악에 대처해야 한다.

진정한 특혜를 누리는 자들

국무총리 정홍원은 “악화되는 연
금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과의 형평
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
피”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정홍원
은 ‘형평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홍
원은 10년 전에 퇴임하면서 매달 4백
28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2006년에
는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한 달 월
급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연금을 매달
2백35만 원씩 받아 갔다.
대통령은 기여금을 한 푼 내지 않아

도 연금을 보장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보수의 95퍼센트를 연금
으로 받는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있다. 교통·통신비는 물
론이고, 본인과 가족의 치료비도 지원
받는다. 이를 위해 올해만 총 20억 원
의 예산이 책정됐다.
19대 이전 국회의원들은 65세 이후
매달 1백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게
다가 이들에게는 연금 외에도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널

려 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엔 공무
원연금이 노후 보장의 전부다. 이조차
재직 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대신
받는 것이고, 20년 넘게 꼬박꼬박 기
여금을 내고 받는 것이다.
평균 수급액이 2백19만 원이라지
만 이는 올해 2인 가구 적정생계비
2백36만 원(최저임금의 2.3배) 수준
이다. ‘특혜’나 ‘귀족’과는 거리가 먼 것
이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삭감해야 하는가?

지배자들은 공무원연금 재정이 위
기라서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대표적 재정 안정화론자인 보건사회
연구원의 윤석명은 재정 부족을 이유
로 공무원연금 삭감뿐 아니라 기초연
금 공약 후퇴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이들은 평생 노동하며 헌신해 온 노
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연금 ‘위기’는 재정 고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OECD에서 노
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것은 정부가 연금에 너무 투자하
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노인의 소득
가운데 연금 등 공적이전 비율은 고
작 15.7퍼센트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프랑스
와 헝가리의 경우, 노인 소득의 85퍼
센트가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다.
OECD 주요 국가의 공무원연금 정부



부자 증세로 연금 재원 마련하라. 6월 28일 전국공무원노조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

부담률은 한국(11.2퍼센트, 퇴직수
당 포함)보다 적게는 두 배 이상(일본
27.7퍼센트), 많게는 5배 이상(프랑스
62.1퍼센트)이다.
사용자인 정부가 평생 헌신한 공무

원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재
정을 투입해야 한다. 연금은 돈 있으
면 주고 없으면 안 줘도 되는 ‘혜택’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 일하지 않는 동
안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따라서 부자들에게는 90조 원이나
감세해 주면서 노동자 연금만 깎을 것
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
을 걷어 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발행인 : 김인식 편집인 : 김인식 인쇄인 : (주)이퍼디 이승철
등록번호 :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6499-2791
제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지난 9월 22일 공무원 노동자들은 한국 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평일임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성년 노동자들은 “적금보다 못한 연금, 정부는 재벌 보험회사 2중대”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공무원노조 웹사이트 게시판에도 조합원들의 항의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크게 분노하고 있고, 항의할 태세도 돼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9월 27일 연금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11월 1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를 준비하며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총궐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노조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지금부터 기층을 돌며 분노한 조합원들을 만나고 연금 개악에 대한 항의 집회와 토론회, 공적연금 개악 반대 서명전 등을 조직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또, ‘공무원들과 등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한 정부를 저지하려면 공무원노조가 지난

7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총파업 및 총력투쟁”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를 좌절시켰던 것도 2004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이고, 전체 노동자 임금 공격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따라서 잘 조직된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고통전가 공세를 저지해 다른 노동계급 부문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은 민주노총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회단체들이 공무원연금 지키기에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적금보다 못한 연금, 정부는 재벌 보험회사 2중대” 9월 22일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를 무산시킨 공무원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가 대안인가?

한편,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공무원연금의 평균급여율을 낮춰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중상위층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삭감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보장하는(또는 덜 삭감하는) ‘하후상박’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 내의 소득재분배가 안 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알못게도, 새누리당 이한구도 ‘하후상박’식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 총액은 삭감하면서 공무원 노동자 내부를 이간질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물론, 공무원 노동자들과 달리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도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직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등 다른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연금을 깎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받는 노동자가 자기 연금을 깎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받는 신규 공무원 등의 연금을 메워 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우선, 2010년 이후 신규 공무원들이 더 열악한 연금을 받게 된 것은 재직 노동자들 탓이 아니라 바로 정부의 연금 개악 때문이다. 지금 연금학회 개악안도 2016년 이후 임용자들은 아예 국민연금 수준으로만 받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래의 공무원이 될 청년들을 희생양 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규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지를 공격해 온 자들이 이제 와서 이들을 위한다며 연금 양보를 외치는 것은 위선일 뿐이다.

이런 식의 개편은 연금 총액을 삭감하면서 노동자 내의 재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노동자 전체에게 손해다. 공무원 노동자들 중 더 열악한 부분의 조건을 후퇴시켜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진정 하위직·신규 공무원의 낮은 연금을 걱정한다면 신규 공무원에 대한 연금

개약부터 철저히 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올려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 내의 재분배는 진정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할 부자와 기업주들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낼 뿐이다.

사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미약해서 그 구실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보험료 소득상한선이 4백8만 원밖에 되지 않아 그보다 훨씬 많이 벌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누진제를 적용해야 진정한 재분배(계급 간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후가 보장되는 적절한 연금과 진정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부자 증세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 내의 재분배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 노동자 내의 분열을 불러일으켜 공적연금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동력을 갇아먹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총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공무원연금을 지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적금으로 만들겠다는 개악안이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일하고 급여도 많이 받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현재 공무원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이고, 퇴직 때까지 재직 기간은 23년 4개월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은 1백 인 이상 작업장의 77.6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공무원들은 24시간을 시간 외 근무를 해도 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받는다. 휴일과 야간근로 수당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 낮은 퇴직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미적용, 노동기본권 제약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불이익을 연금으로 보상하겠다고 해 왔다.

하지만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악안에 따르면 2016년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30년 일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이 고작 76만 원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도 평균 84만 원을 받고 있으니 국민연금보다 못한 것이 된다. 게다가 공무원들이 내는 돈은 현재 평균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라간다.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꼴이다. 만약 개악안대로 된다면 공무원연금은 자신들이 낸 돈의 1.13배밖에 못 받는다. 연금이 아니라 적금이다. 연금의 핵심적 기능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도 사라진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재정적자 해소다. 하지만 연금은 재정적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과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연금학회 회장조차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정부의 재정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금 개혁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국민의 적정소득 보장 기준과 정부의 재정 대책 정도는 내놔야 한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를 빌미로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곧이어 공적연금 전반을 공격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연금학회 개악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삼성생명이 공무원들에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고 마케팅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면 부자와 재벌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

부자와 재벌, 고위직 공무원, 판검사 등은 재산도 많을 뿐 아니라 고액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왜 하위직 공무원들은 재직 기간에도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고, 퇴직 이후에도 낮은 연금으로 고통받아야 하나!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을 추진하면 공무원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의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공무원노조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인 연금 개악을 추진할 시 조합원 총회, 파업 찬반 투표 등을 하며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낼 것이다. 파업권이 없는 공무원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파업을 벌인다면 전면 대결이 될 테고, 공무원노조도 탄압을 받겠지만 정부도 국정 운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투쟁을 통해 단지 공무원연금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생각이다. 길게 보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권 교체도 해야 한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악만을 두고 싸워 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악 때 함께하지 못했다. 우리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었고, 이제는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다짐했다. 국민의 권리가 빼앗기면 내[공무원] 권리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지켜내야 향후 벌어질 국민연금 개악도 막아 낼 수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인터뷰·정리 최영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진실 규명의 적들에게 또다시 배신당한 세월호 유가족들

김문성

박근혜는 9월 30일 각료회의에서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국정과 경제 살리기가 표류한다고 했다. 특별법 타협 불가능 물론이고 단독 국회도 불사하라는 메시지를 새누리당에 전한 것이다.

바로 그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와 3차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은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군 4인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고,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박영선은 야당 몫의 추천권에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뒤통수만 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는가.

유족 참여는 보장하지 않으면서,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인사는 (중립성을 추구한답시고) 배제할 근거를 만들어 냈다. 정권의 압력에서 자유롭게, 독립

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길 바라는 유가족과 지지자들에게 합의문이 ‘최악의 공수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족대책위는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주체는 여당이지 유가족 대표가 아닙니다. ... [합의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9월 30일 가족대책위 기자회견문)

사실,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라는 주장을 완화[해서라도] ...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고 싶”어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배신할 절호의 기회로 악용했고, 이는 또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자신감을 키워 줬다.

권영국 변호사의 말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여부가 특검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실제로 담보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정경이 기자

잊지 않게 유가족들에겐 하루하루가 아직도 4월 16일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은 우리를 그 날에 가둬 놓고 자신들의 시계는 앞으로 돌리려 한다. 그러나 결코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유가족의 음주 시비에 구속영장 청구? 이진 마녀사냥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조직을 총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때문에 민생이 파탄 난다는 식의 흑색 선전을 해댔다. 이것이 먹히는 데에는, 유가족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해 온 새정치연합의 무능과 위선이 도움이 됐다.

〈TV조선〉 등은 대리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침소봉대해 ‘24시간 마녀사냥’

을 벌이고 있다.

결국 경찰은 가족대책위 전(前)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쌍방 폭행이나, 아니냐’ 상호 진술이 엇갈리고, CCTV 화면에서도 불분명한 점이 있으며, 도주 우려도 없는 경미하고 흔한 음주 시비 사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점죄이자 여론몰이를 통한 가

족대책위 압박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 일반인대책위도 가족대책위와 반목하고 사실상 여권에 유리한 언행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야비한 책략으로 ‘강요된 타협’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다. 야합 이후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

박근혜가 강경 대응을 지시한 9월 30일 아침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 좌초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전원 구조됐다. 이번에도 먼저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것은 인근 어민과 유람선들이었다.

문제는 사고 선박이 27년 된 중고 선박을 수선하고 증축해 올해 5월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도 폐기 처분해야 할 낡은 배의 취항을 목포 해경이 허가해 준 것이다. 당시 홍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반대했

는데도 말이다.

그동안 세월호 운동이 해 온 경고가 울었다는 게 입증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윤이라는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투쟁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다.

더디더라도 원칙을 지켜 싸우자

9월 이후 운동이 다소 소강 국면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9월 27일 노동자대회를 취소하는 등 동원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작지 않다.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데다 집회 동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망을 둘러싼 견해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일부 NGO 지도자들은 특검 수준으로 요구를 후퇴하자고 주장한다. 그래야 국회 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 주요 NGO들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30일 발표한 ‘제안문’이 그런 것이었다. ‘탈진영론’이 새정치연합의 배신적 타협을 정당화해 주는 맥락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국회 파행에 가족대책위의 원칙적 태도도 한몫 한다는 식

의 논리로 이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 실제로 유가족들이 특검 추천권으로 후퇴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모욕뿐이었다. 이른바 화해(중재)파들은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일부는 공식 입장도 아닌 ‘원로’들의 ‘제안문’을 대책회의의 사이트에 올리고 온라인에서 홍보했다가 항의를 받고 내렸다.

한편, 일부 급진좌파는 특별법에 갇히지 말고 ‘안전 사회’나 ‘박근혜 퇴진’ 같은 더 폭넓은 의제로 투쟁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놓고 전선이 첨예하게 형성돼 있다. 이를 건너뛰어 다른 의제로 가자는 것은, 말은 좌파적이지만 실

은 뜨거운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다.

이 모든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가족대책위나 운동 참가자들이 고립감이나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완강히 버티는 국가 권력을 상대로 원칙을 지키며 싸우는 일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장 어렵다 해도 원칙을 지키며 싸워야 더 많은 대중에게 그 올바름을 입증받아 운동을 성장시킬 수 있다.

특히 하반기 2대 핵심 투쟁 과제로 “세월호 참사 대응”을 꼽고, “현장 투쟁과 세월호 국민 적극 결합 기조를 실현”하겠다고 한 민주노총이 정말로 실질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

새정치연합, 갈팡질팡하다가 배신하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규명기구 설립은 애당초 포기했다. 그대 놓고, 특검 추천권 문제로 사안을 가두더니, 마침내 특검 추천에서 유가족 참여를 배제하는 합의를 했다.

여권과 우익의 집요한 공격을 받던 가족대책위가 ‘이번에는 설마’ 하고 새정치연합과 협의했는데, 새정치연합은 아주 제대로 배신을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를 핑계로 국회 등원을 거부해 왔지만, 따져보면 정작 한 것도 없다.

장외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전국 순회를 하며 진실 홍보나 서명 운동에 도움 준 것도 아니다. 한 것이라곤 ‘유민 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 중단을 설득하려는 제스처용 ‘동조 단식’뿐이었다.

이제 와서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참여해 자기 지역구나 유관 이익단체를 챙기고 싶은데, 그냥 들어가는 눈치 보이니 특별법 합

처음부터 끝까지 유가족을 이용하고 버린 것이다. 세월호는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는 핑계였을 뿐이다.

박영선은 트위터에 “이 땅에서 약자의 서러움과 눈물을 닦아 주는 일이 이렇게도 힘든 것인지 ...” 하며 가증스런 뉘저리를 늘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노골적으로 친자본주의적인 정당으로서 친기업 경제 살리기를 발목 잡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새누리연합’이라 부르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항운 규제 완화와 직결된 부패의 한 부분인 새정치연합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리도 없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NGO 대표들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새정치연합을 믿고 중재자를 자처하며 9월 30일 ‘여야는 물론이고 유가족들도 원칙을 양보하라’는 제안문을 발표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135호 온라인 기사를 읽어보세요

서평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 –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서평 〈값스를 읽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계급투쟁을 삭제하고 싶어 하는 책

간접고용에 맞선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연금을 연금답게’ 제천촛불문화제

제천 시민, 공무원 노동자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외치다

서울시에 경정비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오바마의 전쟁과 함께 재개된 한국 검찰의 반전 운동 탄압

www.wspaper.org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는 민영화 공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강동훈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주민세 인상 서민 증세를 추진한 데 이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공무원 연금 개악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9월 19일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는 공공기관 퇴출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요금 인상 등

이 포함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민영화를 주문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성장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상황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올 초 4퍼센트로 예상했던 한국 경제 성장률은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다.

게다가 재벌들의 수익성도 악화하

고 있고, 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한국의 재정적자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위험 요인을 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더 큰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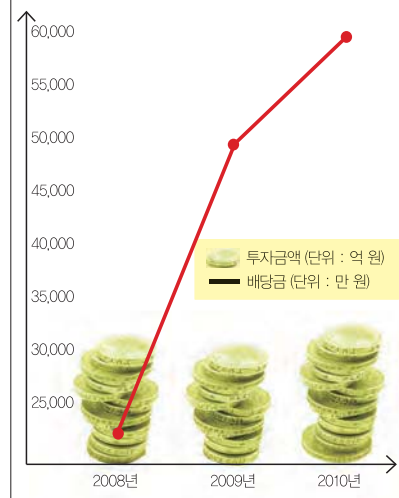
이번에 발표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아직 박근혜 정부와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닌 듯하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은 "중장 공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주요 방향과 일치한다.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삭감하는 이른바 '방만경영 해소'를 10월 중으로 일단락하고 그 후에는 2단계로 민영화와 기능 조정 등을 통한 부채 감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T의 투자금액과 배당금

투자는 제자리걸음인데 배당금만 폭등했다.



또다시 거론된 최악의 철도 민영화 계획

정부가 이미 수서발 KTX 회사 설립으로 시작한 철도 민영화의 경우, 새누리당의 안은 코레일(철도공사)을 완전히 분할하고 운영권을 사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안이다.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지방의 적자 노선은 폐선하고, KTX뿐 아니라 일반철도, 광역철도, 화물 등 모든 노선을 사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물 자회사 분리 등 기존 정부 계획보다 더 나아간 민영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사기업들이 코레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현재 코레일이 맡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 보수와 철도 관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결국 대형 참사와 요금 인상으로 악명이 높은 영국식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분할 전에 철도시설 유지 보수와 철도차량 정비 업무도 사기업에 위탁하고, 사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선로 사용료를 낮추고, 물가



영국식 철도 민영화는 대형 참사와 요금 인상을 낳는다.

상승에 따라 철도요금을 올리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철도 노동자 10퍼센트를 감축하고 인건비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뿐 아니라, 자동승진제나 근무지 변경 시 노조의 동의를 받기로 한 단체협약도 개악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력·주택·도로까지 다 팔겠다?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2002년 발전 파업으로 중지된 발전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안을 내놔다. 발전 공기업들을 상장해 매각하자는 것이다. 현재 5개로 분할된 발전 공기업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수익성만을 앞세운 통합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전력 판매 민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전을 통하지 않고 발전회사들이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일본 등의 민영화 사례를 보건대, 전력 판매를 민영화하면 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전력회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대규모로 전기를 소비하는 기업들에게는 요금을 더 많이 깎아 주고 대신 가정용 요금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또,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해 자동으로 올리고, 송배전 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의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올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때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급증한 것은 재벌들에게 원가 이



공기업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 말라!

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재벌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비싼 값에 사 주면서 생긴 것인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도 너무 많으며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관리도 민간 건설회사에게 최대한 넘기자고 한다.

그러나 201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백12만 4천 가구로, 전체 가구 수 대비 6.1퍼센트, 주택 수 대비 5.9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가 목표로 밝혀 온 공공

임대주택 비율 10퍼센트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까지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LH공사의 부채를 정부가 탕감해 주고 정부 지원금을 늘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하는 고속도로 건설과 도로 유지 보수 업무도 사기업에 넘기자고 한다. 정부 보조금과 도로요금 인상으로 사기업들이 편하게 돈을 버는 민자 도로만 늘어날 것이다.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장호중

9월 19일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의 핵심은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병원이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수영장업, 목욕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외 환자 유치이다. 그러나 이런 부대사업들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환자에게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예컨대 의료진이 무릎이나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병원에 딸린 수영장 등 체

육 시설을 권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수치료’, ‘아로마테라피’처럼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각종 ‘치료법’이 병원 간판 아래서 이뤄질 것이다.

장애인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도 신설됐다. 장애인보조기구는 대다수 노인과 재활치료 필요 환자들에게 필요한 기구로, 휠체어·목발 등을 떠올리면 된다. 이런 기구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데 부대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반 상품처럼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숙박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허용해 병원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만들 수 있게 허용했다. 메디텔도 해외 환자 유

치를 명분으로 한 시설이지만, 객실의 최대 40퍼센트까지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병원이 메디텔 만드는 것이 이미 허용됐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런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병원 안에 메디텔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메디텔을 사실상 영리병원처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메디텔 객실은 형식적으로는 병원 시설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할 필요도 없다.



더 많은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한다면 지금까지 보여 준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7월 22일 보건의료노조의 2차 파업 집회

법조차 무시하다

주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조차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대사업 범위가 너무 넓어, 상위법인 의료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부대

사업으로 허용하려 했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매 우려가 있다”며 제외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자 양보 제스처를 쓴 것이다. 그러나 사실 부대사업 중에 강매 우려가 없는 상품은 거의 없다.

그런데 정작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2014년 하반기에 아예 의료법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부대사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어처구니없게도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날 ‘특이사항이 없다’며 법안을 법제처로 넘겼다고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서면 의견서가 6만여 개나 접수됐는데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백만 명이 서명한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 용지도 접수하기를 거부했다.

이런 의료법 시행규칙은 원천 무효이고 재개정돼야 한다.

10월 말 보건 노동자들의 투쟁과 11월 1일 범국민대회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이 그저 순탄치만은 않다. 의료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은 벌써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을 만들겠다고 썬얼병원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진 것처럼 썬얼병원의 모기업 CSC의 회장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최대 주주는 부도 상태였고, 부지는 매물로 내놓은 지 오래였다. 정부는 결국 한 달 만에 불승인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회 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문제를 지적할 정도다.

논리가 공색해지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조차 “공급재[병원]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겠다”며 문제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 등이 상반기에 벌여 온 활동 덕분이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여론을 환기하고 반대 의견을 모으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일각에서는 세 차례 파업에도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자 파업으로는 힘들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세 차례 파업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사기는 다소 올라갔다. 투쟁 경험이 적은 병원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 투쟁을 통해 다소 자신감을 얻었고 이는 앞으로의 투쟁에 디딤돌이 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벌인 7월 22일에는 무려 60여만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미흡하나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반대 목소리를 모으는 구심 구실을 했음을 보여 준다.

노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던 서울대병원 측은 1주일에 걸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강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병원이 어디인지 공개하지도 못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이러저러한 핑수를 써 가며 의료 민영화를 강행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특히, 훨씬 폭넓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월 말부터 파업 등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 본도 오는 11월 1일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상반기에 결성된 지역별·권역별 대책위들도 이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 개악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9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보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늘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서민 증세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노동자·서민의 보험료는 늘어나고 부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줄게 생겼다.

첫째, 연금을 포함해 보험료 부과 대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수령하는 연금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연금 삭감 계획이나 마찬가지다.

둘째, 양도, 상속, 증여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셋째,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축소하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이 조처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넷째,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 정액의 기본보험료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본보험료를 8천 원~1만 5천 원 사이에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료 상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것은 서민들의 보험료를 늘리는 역진적 조처다. 현재 월 1만 5천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오른다.

기존 보험료 부과 체계의 역진성

물론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매우 역진적이고 정의롭지 않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역진적이다. 상한제 때문에 3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재산 대비 보험료 부담은 경감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임금 외에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총소득 대비 보험료 부과 비율은 줄어든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6퍼센트에서 2005년 이후 80퍼센트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85.7퍼센트로 증가했다. 국고 지원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고, 노동자·서민의 부담으로 보험 재정을 메웠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의 보험료 분담 비율을 현행 5:5에서 4:6으로 바꾸고, 국고 지원을 현행 20퍼센트 수준에서 30퍼센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더욱 역진적인

보건의료 운동의 온건파는 정부의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개선이라고 보는 듯하다.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제도는 유럽의 완전고용 시절을 그 모델로 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금융 자산 비중이 낮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 현재 사업소득은 62퍼센트 정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완전히 드러나지만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존의 재산 부과 체계를 없애면 임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부과 체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른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는 임금 노동자를 주된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1995년 12월 공공부문 파업으로 정부가 1천대 기업 매출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노동자와 서민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면 일련의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 체계의 누진성(부자가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보험료로 내는 것)을 강화하고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국고 지원은 직접세와 법인세 등 누진적 세금을 늘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와 좌파

김하영

민주노총 임원직선제가 12월 3~9일 실시된다. 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월 2일 선거공고가 되고, 11월 3일 후보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는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제기돼 왔다. 1998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직선제 공약이 처음 제기됐고, 2000년대 중반 민주노총 위기가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선제를 통해 민주노총을 쇄신할 수 있기를 바랐다. 논란 끝에 2007년 임원직선제가 결정됐으나 실시 유예를 거듭하다가 오늘에 이르렀다.

토론의 장

노동자연대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임원들을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이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직선제 자체가 민주노총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직선제를 핵심적 혁신 방안으로 여겨온 사람들은 '민주노총 지도력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받고 조합원이 민주노총에 냉소적인 상황'에서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을 주체로' 나서게 하고 '조직을 바닥에서부터 재조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직선제 선거 과정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의 방향과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토론하는 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좌파 활동가들은 이를 활용해 조합원들의 토론과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러나 상층과 현장의 분리나, 지도력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받는 문제는 노동조합 관료의 (불가피한) 존재에서 비롯한 것으로, 선출 방식의 변화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실질적인 저항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본성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때때로 투쟁을 조직하지만 흔히 조합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투쟁을 중단하거나 약속했던 파업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도자들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일관되게 옹호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투쟁을 철회하는 일이 거듭될 때 이를 극복할 대안이 없으면 조합원들 사이에 냉소와 무관심이 퍼지기 마련이다.

이것은 특정 정파 소속의 지도자들만이 저질러 온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수년 동안 한 정파에 의해 휘둘러' 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입장에서는 직선제를 그 정파의 연속 집행을 막을 방법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동요와 투쟁 회피, 또는 약속했던 총파업을 철회한 전력은 상대적으로 좌파적인 지도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산별·연맹이나 단위노조의 경험을 보아도 아무리 직선으로 선출된 지도부라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철도노조는 10여 년 전부터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에 보았듯이 중앙집행부가 일방으로 파업을 종료할 수 있고, 8·18 단협 개약 합의 때 보았듯이 노사합의 체결 전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혹자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는 직선제 쟁취 투쟁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직선제가 일반화된 민주노조 진영이 급속한 관료화를 경험해 왔다는 엄연한 사실을 봐야 한다. 이

는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단지 직선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직선으로 선출된 지도자라도 현장 조합원들의 통제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와 현장 조합원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관료적 권한을 제약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과 양보를 독단으로 하거나 파업을 일방으로 철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장조합원들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되도록 민주노총 대의원들을 모두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은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 자신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지도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규약도 조합원들의 자력 투쟁 노력이 약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현장 조합원들의 힘을 강화해야만 지도자들이 투쟁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지도자들이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않을 때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좌파적 지도부 세우기 전술의 의미

이렇게 원리·원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이번 직선제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원리·원칙에서 출발한 것은 좌파 활동가들과 투사들이 이번 직선제 선거를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말하려는 것이다.

좌파 활동가들과 투사들은 이번 직선제 선거를 활용해 현장 조합원들의 자주적 활동을 고무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야 한다.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 민주노총의 과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활성화하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 소식을 교류하며 연대를 확대하고, 기층 투사들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도록 애써야 한다.

만약 선진 노동자들을 대변할 팬층은 대안적 후보가 나와 기대를 불러일으킨다면, 이런 활동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 내 세력관계를 좀더 왼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북돋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좌파 활동가들이 이런 후보를 내어 이번 선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일각에서 말하듯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수용 찬반 투표 결과나 철도노조 8·18 합의 인준투표 부결은 현 시기 현장 노동자 정서의 특징을 보여 준다. 오랫동안 침체됐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다.

지금 현장 노동자들은 스스로 투쟁에 나설 만큼 자신감이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잘 싸워 줄 지도부를 원하며, 그런 지도부가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면 이에 응해 투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투쟁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도부가 계획한 것보다 투쟁을 더 발전시키고, 조직을 성장시킬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현장 조합원의 자주적 활동성을 고양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이 단순히 좌파 집행부 세우기에 의의를 두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좌파 활동가들과 투사들은 무엇보다,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가 박

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실질적인 저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즉,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돼야 한다. 그동안 많은 지도부가 투쟁을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언행일치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정국을 끝내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기 위한 공세를 다시 펴려 한다. 경제 위기 시기에 단호하고 실질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는커녕 지키기조차 할 수 없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이 점에서 부족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말 철도 파업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양보 불가 입장으로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하는 강수를 뒀을 때, 현 지도부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에 즉각적 파업 돌입을 명령하기를 주저하고 파업을 두 달 반 뒤로 미뤘다. 그럼으로써 좋은 반격 기회를 날려 버렸다. 세월호 정국에서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산하 노조들의 힘을 사용하지 못했다.

정치의 중요성

물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고 해서 투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의 전략을 이해하고 제대로 맞서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노동계급을 단결시키는 것이다.

박근혜는 마거릿 대처와 달리, 노동계급의 주요 부문들을 하나씩 차례로 공격할 만한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다양한 부문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대신 (대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간질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각개격파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개악이나 공공부문 단협 개악(사내복지 축소) 등 공공부문을 공격할 때 '철밥통' 논리를 내세워 이들을 고립시킨다. 통상임금 '정상화'는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특이 될 뿐이라고 이간질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의 지렛대가 되고, 공공부문 '방만' 비난은 민간 기업의 노동조건 악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시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단결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잘 조직된 부위의 자신감을 분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전략에 맞서 연대하고, 또한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그 힘을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위해서도 사용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조합원들뿐 아니라 비정규·미조직·이주·청년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회 집단들의 처지를 대변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문제나 국정원 대선 개입 같은 정부의 부패에 맞서는 정치적 민주주의 투쟁도 민주노총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2008년 촛불 운동 때 노동조합이 거의의 운동과 만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올해 세월호 투쟁에는 (초기에) 노동자들의 집단적 참여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런 운동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파업 같은 노동자 고유의 경제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좌파 활동가들은 직선제 선거를 활용해 민주노총의 방향과 노동운동의 과제에 관한 주장을 활발히 펴면서, 여러 작업장과 지역의 투사들을 폭넓게 접촉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미래의 투쟁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오늘날의 국제 계급투쟁

세계적 석학으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 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8월 7~10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4'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캘리니코스가 8월 10일 강연한 '오늘날의 국제 계급투쟁'을 녹취한 것이다. [] 속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

사진:이윤선

올해로 2007년 8월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정확히 7년이 됩니다. 2008~09년에 일어난 대침체(Great Recession) 국면은 비교적 짧았지만, 그 뒤로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마르크스주의자 마이클 로버츠는 이것을 장기 불황(Long Depress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오랜 기간 경제성장률이 예전 추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많은 부분들에서 이런 현상이 관측됩니다. 이렇게 오래 끄는 위기 속에서 전 세계 계급투쟁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것이 이번 강연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윤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지배계급은 그동안 아주 치열하고 악랄하게 계급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전 세계의 지배계급들은 신자유주의를 더 급진화시켜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 합니다.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긴축 정책, 즉 공공지출을 급격히 줄이려는 움직임은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공부문을 더욱 민영화하려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정책들의 목표는 모두 착취율을 끌어올려서, 즉 노동자들에게서 잉여가치를 더 많이 뽑아 내서 이윤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배계급은 이번 위기에 대응해서 [그들 편에 서의] 계급투쟁을 더 강화했습니다.

국제 계급투쟁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2011년 아랍 혁명

노동자들의 대응은 어떤가요? 노동계급 쪽에서는 양상이 더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적 저항 운동의 최고점은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 초, 아랍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풍을 연 것은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이었습니다. 그 혁명으로 그 나라들의 독재자들이 타도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 두 나라의 혁명이 독재 정권뿐 아니라 그 정권들이 시행했던 신자유주의에도 반대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더욱 키웠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고 대중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빈곤이 대규모로 확산됐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가장 앞장서서 추진한 곳이 벤 알리 치하의 튀니지와 무바라크 치하의 이집트였습니다.

이런 빈부격차 증대에서 가장 크게 득을 본 이들은 부자이기도 했고, 정권과의 유착도 끈끈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이 두 정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정실 자본주의의 표본인 정권들을 말합니다. 이집트와 튀니지, 더 나아가 시리아 등지에서 일어난 반란의 주요 요인 하나는 빈곤과 실업이었습니다. 특히 대졸자 청년들의 빈곤과 실업이 심각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우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아랍 혁명, 그중에서도 이집트 혁명을 보며 영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특히 2011년 1~2월의 타흐리르 광장 점거 운동은 집단적 자체 해방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혁명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를 알기 위해 프랑스 혁명이거나 러시아 혁명을 다른 책을 읽을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타흐리르 광장을 보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도 타흐리르 광장 점거 운동을 모방한 운동들이 등장했습니다. 2011년 5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 등지에서 '광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주요 도시들에서 광장을 점거했습니다.

또, 그해 가을에는 미국에서 점거하라(Occupy) 운동이 시작됐고, 점거하라 운동은 [뉴욕 맨해튼의 주코터 공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점거하라 운동은 투쟁이 얼마나 빨리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매우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청년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뉴욕은 시몬주의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의 사람들이 아랍 세계의 (가장 큰) 도시에서 일어난 운동을 모방했습니다.

그 뒤, 점거하라 운동은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해 겨울 저는 미국에서의 혁명이 독재 정권뿐 아니라 그 정권들이 시행했던 신자유주의에도 반대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더욱 키웠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고 대중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빈곤이 대규모로 확산됐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가장 앞장서서 추진한 곳이 벤 알리 치하의 튀니지와 무바라크 치하의 이집트였습니다.

'총파업은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일어났고, 그조차 상징적 의미의 파업이었습니다. 또, 점거하라 운동은 일반으로 말해 수

명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점거하라 운동은 미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티파티의 우익 광신도들이 미국의 정치 담론을 주도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1퍼센트에 맞서는 99퍼센트'라는 점거하라 운동의 구호가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구호는 (우파들의 주장과 달리 정부보다는) 극소수인 기업주들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매우 분명하게 표출했습니다. 불평등에 관해 광범하게 연구한 피케티의 책이 특히 미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데에는 이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2011년의 운동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급진화가 얼마나 심화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나 급진화에서 자본주의가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급진화와 수세적 노동계급 투쟁 사이의 간극

그 결과, 선진국에서도 타흐리르 광장 점거 운동을 모방한 운동들이 등장했습니다. 2011년 5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 등지에서 '광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주요 도시들에서 광장을 점거했습니다.

또, 그해 가을에는 미국에서 점거하라(Occupy) 운동이 시작됐고, 점거하라 운동은 [뉴욕 맨해튼의 주코터 공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점거하라 운동은 투쟁이 얼마나 빨리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매우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청년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뉴욕은 시몬주의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의 사람들이 아랍 세계의 (가장 큰) 도시에서 일어난 운동을 모방했습니다.

그 뒤, 점거하라 운동은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해 겨울 저는 미국에서의 혁명이 독재 정권뿐 아니라 그 정권들이 시행했던 신자유주의에도 반대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더욱 키웠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고 대중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빈곤이 대규모로 확산됐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가장 앞장서서 추진한 곳이 벤 알리 치하의 튀니지와 무바라크 치하의 이집트였습니다.

'총파업은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일어났고, 그조차 상징적 의미의 파업이었습니다. 또, 점거하라 운동은 일반으로 말해 수



투쟁하고 있는 남아공 금속 노동자들

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자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 급진화와 노동계급 투쟁의 수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투쟁들은 규모가 엄청나게 컸지만, 모두 수세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노동조합 관료들의 주도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노동조합 관료가 매우 빠르게 주도력을 확립했습니다. 무바라크 퇴진 뒤 결성된 신생 민주노조들에서 노조 관료층이 매우 빠르게 형성됐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민주노조 운동의 지도자가 군부 쿠데타 이후 집권한 정부의 노동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이런 패턴은 지난해의 대규모 경제 위기, 즉 1930년대 대불황 때 나타난 패턴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1934~36년 미국에서는 봉기에 가까운 대중파업들이 일어나고 주요 산업에서 노조가 조직됐습니다. 예를 들어, 1934년 미니애폴리스 시에서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주도해서 트럭 운전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됐고, 이 파업을 계기로 운수업이라는 매우 중요한 산업에서 노조 조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935~36년에는 자동차 공장 점거 파업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이 투쟁은 자동차 산업에서 노조가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1934년 프랑스에서는 파시즘의 집권 가능성에 직면해 대중 시위가 거대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을 발판으

로 1936년에는 거대한 대중파업과 공장 점거 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투쟁들은 공세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합원들이 상당한 주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의 노동자 투쟁에서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노조 관료의 주도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2010년 프랑스에서 파시스트들은 파시스트인 국민전선 1위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연금 개악 반대 파업을 배신할 수 있었던 이민에 반대하며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노동계급 중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대중파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전히 거리에서의 운동이 작업장에서의 운동을 압도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파파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11~12년 매우 용감하지만 경험은 적고 미숙한 많은 젊은 활동가들이 선거 보이콧을 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엘 시시가 이끄는 군부가 무슬림형제단에 반대하는 저항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혁명 운동이 거리 운동보다 작업장 투쟁

을 더 중요한 중심으로 일어났더라면 군부가 그런 식으로 대중 정서를 이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계급투쟁의 수세적 성격은

좌파의 성장에도 제약이 된다

노동자 투쟁이 수세적이고 [그 수위가] 제한적인 것은 좌파가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대중파업론>이라는 유명한 소책자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대중파업이 경제적 요구를 내걸고 일어날지라도 정치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중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힘이 있음을 자각하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체 조직들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도 더 명확해지고 더 발전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좌파가 크게 약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대중파업이 일어나면, 그 전 몇십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벌어지던 정치적 논쟁들의 의미가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현재 유럽에서 좌파들은 지난 몇 년간 오히려 파멸화되고 약해졌습니다. 2000년대 초 일어난 반자본주의적 급진화의 첫 물결에서 큰 수혜를 입은 주요 정당으로 이탈리아의 리프다치오네 코무니스트(재건공산당)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공산당은 [2007년] 경제 위기의 초반에 자충수를 너무 많이 뒀고,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세력이 됐습니다.

이런 위기와 파멸화는 불행히도 혁명적 좌파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프랑스의 반자본주의신당 NPA와 제가 속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도 여러 차례 분열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급진좌파가 약해진 덕분에 유럽에서는 급진우파가 위기를 이용해 활개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물론 각국 국가들이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을 더 키우고 있는 것도 급진우파의 성장에 한몫했습니다. 급진우파들은 점점 더 인기가 떨어지는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선동과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선동을 결합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5월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프랑스와 영국에서 극우파가 1위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시스트인 국민전선 1위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연금 개악 반대 파업을 배신할 수 있었던 이민에 반대하며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특히 남유럽에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유럽의회 선거였지만, 그리스에서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1위를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광장 운동'에서 생겨난 신생 급진좌파 정당[포데모스]이 마치 해성처럼 등장해 8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곳의 투쟁 수준이 더 높은 상황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뿐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계급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왔습니다. 그 덕에 유럽 전체에서 급진좌파의 상



전 세계 투쟁하는 사람에게 큰 영감을 준 이집트 혁명

대적 규모가 가장 큼니다. 스페인에서도 큰 폭진한 거리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2011년뿐 아니라 그 뒤로도, 주재 가입류와 강제 퇴거에 반대하는 운동이나 천대받는 집단들에 대한 연대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공세적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남아공

유럽이 아닌 곳으로 눈을 돌리면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달[2014년 8월]은 남아공 서북부 마리카나에서 파업을 벌이던 광업들이 학술당면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달입니다. 마리카나 학살은 남아공 정치에서 핵폭탄급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 차별·격리 체제의 종식 이후 남아공 노동자들은 아프리카민족회의 ANC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ANC 정부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일부가 매우 부패하게 됐습니다. 특히, 남아공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광산업에서 그랬습니다. 전국광원노조 NUM의 지도자들은 기업들에 사실상 매수당했습니다. 노조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장과 더 가까운 직장 위원들도 일반 노동자 임금의 세 배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이에 반발한 현장 조합원들이 광원 노조에서 떨어져나와 광원건설노조연합 AMCU를 결성했습니다. 최근에 광원건설노조연합은 백금 광산에서 다섯 달 동안 파업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태 전개가 남아공 노총(코사투) 내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 NUMSA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속노조는 ANC 정부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새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남아공에서는 금속 노동자들이 큰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NUMSA는 남아공에서 새 좌파 정당을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국제적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운동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철도파업이 전환점이었던 듯합니다. 물론 김하영 동지의 강연을 들어 보니 한국에서도 노조 관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오늘날 계급투쟁에서 나타나는 악순환

유럽에서는 왜 노동계급 투쟁의 원인이 그리 힘든 것일까요? 한 가지 원인은 유럽의 노조 관료가 다른 지역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고 노동계급 조직들에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민주노총 관료의 역사는 20~25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노조 관료의 역사는 1백50년이나 됩니다. 때로는 노조 지도자들의 생활학적 나이가 1백50살이나 되는 듯 보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신자유주의가 30년 동안 지속된 뒤에 경제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미국에도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에서 조직 노동계급을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영국에서 우리 동지들은 1984~85년에 일어난 위대한 광원 파업의 3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원 파업은 1년 동안 지속된 매우 크고 영웅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원들도 일반 노동자 임금의 세 배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이에 반발한 현장 조합원들이 광원 노조에서 떨어져나와 광원건설노조연합 AMCU를 결성했습니다. 최근에 광원건설노조연합은 백금 광산에서 다섯 달 동안 파업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태 전개가 남아공 노총(코사투) 내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 NUMSA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속노조는 ANC 정부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새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남아공에서는 금속 노동자들이 큰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NUMSA는 남아공에서 새 좌파 정당을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국제적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영국에서 일어난 연금 개악 반대 공공부문 파업도 그런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파업을 처음에 추종한 것은 SWP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좌파 노동조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너무 성공적이었던 것이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던 작은 노조들을 행동에 나서게 함으로써 더 큰 노조들도 행동으로 발로오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대형 노조들이 행동에 나서니까 파업에서 그 노조들의 힘이 커진 것입니다. 대형 노조의 지도자들이 파업을 점으려 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막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재의 계급투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오늘날의 계급투쟁에서 최선부를 달려면 이집트 혁명은 지난해 7월 군부 쿠데타로 커다란 후퇴를 겪었습니다. 이 후퇴는 무엇보다도 이집트의 좌파가 취약하다는 사실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집트 전통적 좌파의 핵심을 차지하는 스탈린주의자들은 이슬람주의보다는 그래도 군부가 낫다고 봅니다. 지난해 스탈린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엘 시시의 군부 쿠데타를 지지했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노동자연대, 영국의 SWP와 정치사상이 같은 이집트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RS가 이집트 혁명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RS는 이집트에서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기반이 더 넓은 다른 좌파들의 영향력을 상쇄할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투쟁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노출 김홍준·이재웅
토론 정리를 포함한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www.wspaper.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이윤진

우익의 엉터리없는 피케티 비판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한국에서도 피케티 열풍이 일고 있다. 그가 분석한 나라들 못지 않게 한국에서도 부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최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45퍼센트를 가져간다. 일본이나 유럽 나라들에 견줘서도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가 말한 핵심 주장은 단순하지만 설득력이 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자본주의 체제와 긴밀히 연관돼 있고, 자본 축적이 진행될수록 이런 불평등이 증대하고,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고율의 소득세와 재산세(글로벌 자본세)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피케티의 이런 주장에 우익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우익의 반응은 아전인수, 침소봉대, 왜곡이다. 자유경제원 원장 현진권 등이 펴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가 대표적이다.

아전인수, 침소봉대, 왜곡

강원대 교수 신중섭은 자본주의 발전이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낳긴 하지만 인류 역사가 불평등했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불평등이 농경사회에서만 아니라 이미 수렵채집 사회에서도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신중섭은 인류학자 알랭 페스타를 언급하며 자기 주장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알랭 페스타는 사회 불평등의 기술 경제적 바탕은 잉여 식량의 대규모 비축과 이를 위한 정주(정착 생활)에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한다. 다만 그는 수렵·채취민 사회란 야생의 자연 자원을 순화시켜 식량으로 개발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인데, 야생에서 순화까지는 일련의 점진적인 단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렵·채취의 구

석기 시대에서 잉여 식량의 비축을 위한 정주 경제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각각의 원시 부족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사회적 불평등은 잉여물의 생산과 이 생산물에 대한 지배를 둘러싸고 형성된 계급이라는 사회적 구조에서 기원한다. 따라서 불평등은 인류 사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계급 사회의 특징이다.

자유경제원 원장 현진권은 “상대적 빈곤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빈곤층은 존재”하므로 “빈곤을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상대적 빈곤은 있을지라도 경제의 발전으로 절대적 빈곤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 2월 송파동 세 모녀의 안타까운 자살은 뭐란 말인가?

그는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절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세계열적으로 악화되는 뚜렷한 추이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동국대 김낙연 교수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상위 20퍼센트의 실질소득은 41퍼센트 상승했지만 하위 20퍼센트는 24퍼센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한국의 자본/소득 비중(피케티가 제시한 불평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은 2000년에 5.8에서 2012년 7.5로 크게 상승했다.

현진권은 피케티의 경제학이 “상대방에 대한 배 아픔의 인간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며 “소수에 대한 세금 강화로 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경희대 교수 안재욱도 배 아픔의 정서로 소수의 부

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사람들을 가난으로 인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의 완화가 아니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다. 피케티는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가 세습 자본주의로 전락하고 민주주의도 후퇴하기에 불평등을 막는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피케티가 오히려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고?

안재욱의 논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사유재산 보장과 자본 축적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사유재산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자본의 몰수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자본을 몰수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빈곤과 곤경을 겪다가 몰락”했다!

그는 “자본 축적에 대해 대단한 반감을 갖고 자본 축적에 대한 종파세”를 하면 누가 투자하겠냐고 강변한다. 투자된 자본에게 이윤이 많이 생겨야 투자가 많이 이뤄진다는 낙수효과 논리이다.

피케티가 주장하는 고율의 글로벌 자본세(즉 재산세)는 급진적이긴 하지만, 자본 몰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투자는 미래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이뤄지므로 이윤이 많아야 투자가 이뤄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이 이윤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 파업’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피케티는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김공회 외 지음, 바다출판사, 284쪽, 15,000원

좌파의 피케티 읽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가 우익의 피케티 해석이라면,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는 급진좌파와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피케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주장하는 책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대체로 피케티가 지닌 장점을 공정하게 평가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21세기 자본》의 핵심 의의로 분배를 경제의 핵심 문제로 올려놓는다는 점을 든다. 피케티는 자산 소유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이다.

예를 들어, 조셉 스티글리츠는 나쁜 정치를 부추기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시장 실패의 결과인 지대의 형성을 비판한 반면, 피케티는 자본이 낳는 수익은 불안정한 경쟁이나 독점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피케티는 주류 경제학이 지닌 한계를 비판하면서 정치경제학의 복원을 주장했다. 그는 “경제학 분야는 아직 수학이나 완전히 이론적이고 고도로 관념적인 이론에 대한 유아적인 열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역사적 접근이나 다른 사회과학과의 협력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필자들은 대체로 피케티가 지닌 한계도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피케티의 불평등 이론이 자본주의 사회 특유의 착취와 불평등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가 이뤄지는 생산 영역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 피케티의 자본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의 자본이 아니라 부(wealth)를 뜻한다. 그래서 피케티의 자본이나 자본수익률이라는 용어는 노동자로부터 잉여가치를 착취한다거

나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개념이다.

또한 피케티는 자본 축적이 이뤄지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하지만, 정작 생산수단의 분배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피케티는 국가 간 불평등이 수렴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현실은 세계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피케티의 주장이나 논리로 이런 세계적 불평등의 구조가 확립되고 확장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불평등의 증대가 민주주의를 저해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누적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1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1970년

☞ 소득이 고르게 분배된다는 이른바 ‘쿠즈네츠의 가설’이 현실에서는 틀렸음을 통계 수치를 통해 보여 줬다. 또한 그는 축적된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소득 수준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잘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좌승희는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적 번영의 필요조건이라고 솔직하게 주장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시장 질서의 본질이며, 경제적 결과의 불평등이 있어야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양립하기 어렵다. 우익의 민낯이다. 시장경제가 (노동자 대중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 허구임이 우익 자신의 논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좌승희는 “비민주적이고 반자유적인 정치 체제의 경제 성공 사례”가 바로 박정희이고, 이 사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의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분배 악화는 물론 오늘날 유사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또한 발전 친화적 불평등을 거부하는 지나친 평등주의를 추구해 온 결과[이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 보수 정권들과 이들이 강력하게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두고 평등주의라니! 이번 세계경제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에서 조지 W. 부시와 앨런 그린스펀이 도대체 어떤 평등주의 정책을 추진했던가?

이렇듯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필자들은 피케티의 핵심적 내용을 지배계급의 이익에 맞게 다반사로 왜곡하고, 심지어 그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주장한다.

피케티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 책의 필자들에게 딱 적절한 말을 했다. “보수주의자들은 내 책에 우려할 게 아니라, 불평등 자체를 우려해야 한다.”

대까지 상대적 불평등이 완화된 원인인 단지 과세 때문이라는 피케티의 주장은 일면적이다. 왜냐하면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쟁과 혁명의 시기 동안 일어난 노동자 대중의 급진화와 투쟁이 이런 변화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구조화돼 있다고는 말했지만, 정작 피케티가 제시한 자본주의의 근본 법칙들은 실제로 자본주의의 동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피케티가 제시한 자본 수익률은 실제로 자본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촉진하거나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 동학을 파악하려면 피케티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자본(들), 경쟁, 착취, 축적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독일 모델’의 실상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독일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 이유 하나는 독일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과 자본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타협을 이룬 덕분이라고들 한다.(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독일 노동자들의 처지는 점점 악화됐다. 노사 간 사회적 합의 제도 전통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저항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수십 년 동안 독일에는 노사가 협력하는 ‘라인 모델의 합의 제도’가 있었다. 1970년대 초까지 전후 장기 호황기에 노동조합은 오늘날의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사회 부의 많은 부분이 기업주들에게 갔지만, 경제 성장 덕분에 대중의 생활수준도 현저하게 개선됐다.

그러나 전후 호황은 1970년대 중반에 끝났다. 그 후 평균 성장률은 떨어졌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969~73년에 4.9퍼센트였다. 그 후 1973~79년에는 2.8퍼센트로, 1978~90년에는 2.6퍼센트로, 1990~97년에는 2.4퍼센트로 떨어졌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거의 다 이런 불황을 겪었다. 국제 경쟁이 심해졌다. 이런 경쟁 속에서 독일 정부와 기업들은 사회적 합의 제도를 내던지고 노동조합 운동을 공격하며 이윤을 증대시키려 했다. 특히, 2000년대 초 입안돼 이후 대연정(기독민주당·사회민주당 연정, 2005~09년) 기간에도 지속된 슈뢰더(사회민주당·녹색당 연정, 1998~2005년)의 ‘어젠다 2010’이 노동조합 공격의 일환이었다.

슈뢰더의 ‘어젠다 2010’의 핵심은 하르츠법 I~IV였다. 하르츠법의 목표는 “경직된” 독일 노동시장을 대폭 “유연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실업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하르츠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지 115호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을 보시오.)

‘어젠다 2010’과 하르츠법은 사용자의 노동자 공격을 뒷받침했다. 이런 공격은 노동자들에게는 참담한 결과를 안겨 줬다. 2000년대 다수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1996~2006년 독일의 평균임금은 11.4퍼센트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생활(유지)비가 15퍼센트 올랐으므로,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이다.

오늘날 독일에서 거의 7백만 명이 ‘미니잡’*으로 일한다. 미니잡으로는 많이 받아야 월급 4백 유로(약 53만



사진 출처 Sozialografie (틀리거)

하르츠법 I~IV 시행 이후 파견직과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 2004년 하르츠법에 반대하는 독일 노동자들.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미니잡에 고용된 사람 중 2백만 명 이상은 다른 일자리도 병행한다.

독일 정부는 하르츠법이 시행된 2000년대 중반 이후 (공식)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좋지 않다. 저임금·저질 일자리가 늘어난 덕분에 실업률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생긴 일자리는 대부분 파견직과 시간제였다. 시간제로 고용된 노동자의 수는 1994년 6백50만 명에서 2005년 1천1백20만 명으로 늘었다. 오늘날 독일 노동자 4명 중 1명은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한다. 독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파견 노동자는 1백만 명이 넘는다. 총 고용 인구 중 파견 노동자의 비중은 1990년대에는 0.4퍼센트였지만 2010년에는 2.3퍼센트로 증가했다. 파견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시급이 7유로도 안 된다.(독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시급 8.5유로이다.)

전일제라고 해서 사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독일 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베를린 시와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일하는 미용사들은 시급이 2.75유로이고 일주일에 39시간 일한다. 전일제 일자리인데도 월급이 5백 유로(약 66만 원)도 안 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1백30만 명이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Ⅱ를 받아 임금을 벌충할까.

이게 전부가 아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사용자들은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더욱 공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중요한 임무 하나는 사용자의 공격에 맞서 조합원의 처지를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노동조합은 대체로 사회적 합의 제도에 얽매며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그리스 등지에서 노동조합들이 파업 등 대중 투쟁을 벌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독일 노동조합은 잘 조직돼 있지만 투쟁 준비 상태는 매우 취약하다. 2008년 노동자 1천 명당 파업 일수는 5.2일이었다.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것이 독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돼 온 주요 원인이다.

기업 경쟁력 논리

독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투쟁을 준비하지 않고 저임금 저질 일자리 확대와 외주화를 받아들였다.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는 명분이었다.

2008년 임금협상에서 금속노조 지도자들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서라며 임금인상 요구를 포기했다. 정부와 기업은 이미 오래전에 사회적 합의를 내던졌고, 앞으로도 임금·일자리를 계속 공격하리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정치에 매달렸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기업 경쟁력 살리기’를 위해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면,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복지 인하 경쟁이 불게 된다. 한 기업이 임금을 삭감하면 경쟁사의 노동자들도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은 경쟁국 노동자들에게도 임금과 복지 삭감 압박을 가한다. 결국 두 나라 노동자들 모두가 더 많이 착취받게 된다. 기업 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노동자들은 항상 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런 (계급 협력) 정치는 노

동조합의 투쟁 기능을 약화시켜 왔다. 독일 노동운동이 약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과 그로 말미암은 고용구조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단념 정치’에도 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임금 삭감은 일자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구호도 등장했다.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이익도 지키지 못하는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왜 내야 하는지를 종종 묻는다.

노동조합마다 편차는 있지만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여전히 정치적 개인적으로 사회민주당(SPD)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00년대 두 번의 연정(사민·녹색당 연정과 기민·사민당 연정) 동안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공공연한 목표는 공공서비스와 실질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고서라도 독일 자본주의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지지와 지원을 얻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정부가 시위나 파업으로 압박을 받지 않게 하려고 뒤편 했다.

이런 정치에 반대하는 저항도 있었다. 2007년 사회민주당 왼쪽에서 좌파 개혁주의 정당인 좌파당(디링케)이 결성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독일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겠다.

이현주

미니잡

월급이 4백 유로 이하로 정해진 시간제 일자리. 1990년대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일주일에 15시간 이하, 월급이 4백 유로 이하로 제한됐다’(그 이상 일하면 미니잡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야 했다)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주당 노동 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세금 면제 등 여러 혜택을 줌으로써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고자 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투쟁

현장조합원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잠정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9월 29일 통상임금 등 임금협상에 관해 잠정합의 했다.

유감스럽게도 합의 내용은 빈 강통이다. 통상임금 확대, 체불임금 지급, 적용시점 등 중요한 문제에서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다. 올해는 그냥 넘기고, 내년 3월 31일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이마저 임금·근무체계 개악과 연동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합의안에는 설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임금 총액은 유지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됐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9월 2일 대의원대표·대의원들의 반발로 거부된 사측제시안과 다를 게 없다. 이날 사측이 보잘것없는 안을 제시하자, 대의원들은 교섭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항의는 현장조합원들의 불만을 대변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후 한전부지 매입 건이 터지면서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한 대의원은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현장의 분노가 크다. 전면 파업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압력 때문에 집행부는 부분 파업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경훈 집행부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9월 2일 사측 제시안과 다를 바 없는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이는 현장조합원들의 염원을 거스른 것이다.

불만

이 때문에 곳곳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9월 2일 사측 제시안과 차이가 뭐냐? 완전히 조삼모사다.”

“내년 3월 31일까지 합의한다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이번에 타결하면 쟁의권도 없는데, 그때 가서 합의 안 되면 어쩔 거냐.”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경훈 집행부에게 조합원들의 뜻을 보여 줘야 한다.”

잠정합의 직후 일부 공장의 대의원회와 현장조직위원회들은 ‘합의안을 부결시키자’는 입장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활동가들도 적극 부결 선동에 나서고 있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금 찬반투표 개표가 한창이다. 아직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울산 공장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현장조합원들이 이경훈 집행부가 내놓은 수준의 합의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더 단호하게 투쟁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한전부지 매입에서 보듯 사측은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활동가들과 투사들은 현장조합원들의 불만을 투쟁으로 모아내야 한다. 그 래야 사측을 압박할 수 있고, 또한 이경훈 집행부가 또다시 조삼모사식 안을 들고 나와 조합원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한전부지 매입으로 사측이 곤경에 처해 있고, 기아차를 비롯해 그룹사 노조들도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럴 때 확실히 밀어붙여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

허수영



빈 강통 합의안, 잠정 합의안 부결해야 한다 9월 25일 현대차 자본 규탄 및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기아차지부는 이경훈 집행부를 추수하지 말아야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추진한 통상임금 잠정합의는 현대·기아차 그룹사 노조들의 공동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경훈 집행부가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만든 9월 29일은 그룹사 노조들이 파업 수위를 좀더 높이기로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현대차의 합의가 그룹사 노조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현대차 조합원들뿐 아니라 기아차에서도 조합원들은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기아차지부는 9월 25일부터 부분 파업을 재개하고, 올해 첫 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김종석 지부장은 “현대차지부가 끝낸다고 기아차지부가 끝나는 않을 것이다”, “통상임금 확대 적

용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기아차지부는 약속한 대로 이경훈 집행부를 추수하지 말고, 강력하게 파업을 해야 한다. 이는 현대차에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조합원

법원 승소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9월 18~19일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25일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백68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연이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에선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우리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다. 판결 이후 비조합원들의 노조 가입 문의가 줄을 이었다.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한 간부는 ‘다른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신규채용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기간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신규채용 됐는데, 판결을 계기로 역olum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엔 모임을 결성해 ‘호봉 정정’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9월 18일 법원 선고 직후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투쟁을 다짐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처럼 법원 판결은 8.18 신규채용 합의* 이후 위기를 겪던 울산 비정규직 지회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고 있다. 지회가 효과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을 꾀한다면, 투쟁을 구축해 나가는 데도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최근 울산 지회는 비조합원 집단 조

직화를 선언했다. 옳은 결정이다. 전에도 판결 등을 계기로 조합원이 서너 배 이상 늘곤 했고 이는 새로운 투쟁의 힘이 됐다.

그런데 노조 가입의 전제조건을 높게 제시한다면, 이런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일각의 우려처럼, 지금 노

조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들은 주로 소송에 기대를 걸고 아직 투쟁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집단소송을 적극 조직·지원하면서, 노동조합 안에서 함께 토론했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투사로 단련시키려는 포용적 자세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3공장의 한 조합원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나도 투쟁 속에서 변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속기 사업부의 조합원은 “최대한 문턱을 낮춰 더 크게 뭉쳐야 집단 조직화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투쟁에서 멀어지거나 소극적인 조합원들에게도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회가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투쟁의 비전을 제시할 때, 이들의 열의를 되살릴 수 있고 조합원들의 결속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단결 추구는 사측의 고립·분

열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사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울산 지회를 고립시키려고 혈안이다.

정규직 지부와 활동가들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 건설 노력에 함께 연대해야 한다. 특히 현대차지부는 8.18 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2016년까지 계속될 신규채용 반대, 기존의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차별 시정과 전환배치 거부 등에 나서야 한다.

박설

8.18 신규채용 합의

지난 8월 18일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지부, 전주·아산 비정규직 지회가 체결한 신규채용 합의. 울산 비정규직 지회는 사측의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이 합의를 거부하고, 이번 소송을 지속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이번에는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현대중공업노조가 13년 만에 파업을 결의하고 9월 23일부터 쟁의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투표 첫날부터 노동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점심시간에는 1천2백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장을 누비며 경적 시위를 벌였고, 저녁에는 3천여 명이 기세 좋게 집회를 했다.

“이기든 지든 이번에는 꼭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사측은 그동안 우리를 바보 취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처음 집회 때보다 두 번째 집회에 더 많이 모였습니다. 갈수록 집회에 참석 인원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있고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쟁 열기가 높아지고 파업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사측은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관리자들은 아침 출근길부터 도열해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투표소 입구에 진을 치고 노동자들을 감시했다. 한 노동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고위 간부들이 나와 투표소 앞을 지켰습니다. 관리자들이 우리를 불러 하루에 세 번씩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압박은 위축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관리자들의 눈초리를 뚫고 투표에 참가했다. 한 부서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관리자들의 감시에 아랑곳 않고 우르르 투표장에 몰려갔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부서에서도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투표에 참가했다. 결국 사측은 9월 26일 투표소에서 관리자들을 철수시켰다.

노조는 사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미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투쟁을 끌어올려 온 만큼, 본격적으로 파업에 시동을 걸며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하청 단결

한편,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파업은 초미의 관심사다.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동안 정규직의 투쟁을 지지해 함께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최근 사내하청 지회는 원하청 공동 파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내하청 노조에 가입해 있지 않

은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파업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체인력으로 일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타당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파업에 적극 동참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제기해야 한다. 4만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동안 낮은 임금, 고용불안, 산업재해 등에 시달려 왔다. 이들의 염원을 받아안고, 함께 싸우자고 설득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동참은 파업 효과를 높이는 데 사활적이다.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규모는 정규직의 두 배가 넘는다. 정규직이 파업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업을 계속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실제로 2011년에 한진중공업에서 이런 뼈아픈 일이 벌어졌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지금은 원하청 공동 투쟁을 실현할 좋은 기회다.

김지태



현대중공업에서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10월 1일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총회 부당개입 규탄과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영국 노동자들이 10월 동시다발 대중 투쟁을 예고하다

10월 셋째 주 영국 노동자들이 대중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7월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인 이래 세 달 만에 일어나는 파업이다.

이 투쟁의 포문을 여는 것은 공공서비스노조(UNISON) 소속 보건 노동자들이다. 10월 13일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파업은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임금 인상 파업이 될 것이다.

이 파업에는 공공서비스노조뿐 아니라 영국일반노조(GMB)와 유나이티드(UNITE: 운수일반노동조합)와 통합기계공전자노조의 통합 노

조) 소속 보건 노동자들도 동참할 것이다.

NHS 노동자들의 처지는 그동안 악화돼 왔다. 물가 인상으로 NHS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011년 이래 평균 12퍼센트 줄었다. 생활임금(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꽤 있다. 간호사의 70퍼센트는 앞으로 2년 동안 임금이 동결될 예정이다.

보건 노동자들의 투쟁은 영국 정부의 NHS 공격에 맞서는 운동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보건 노동자들의 파업 바로 다음 날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자 1백만 명이 파업할 예정이다. 또,

그 다음 날인 15일에는 공무원노조(PCS)가 파업을 벌인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영국노총(TUC)과 스코틀랜드노총(STUC)이 각각 런던과 글래스고에서 긴축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얼마 전 치러진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에서 보수당 정부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났다. 스코틀랜드 독립 운동이 광범한 반긴축 정서와 맞물리면서 크게 일어났던 것이다. 물론 미국 등 동맹국 지배자들의 협박 속에 스코틀랜드 독립은 일단 좌절됐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차승일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최근 경찰이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을 추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취직시켜 주고 이들의 하루 임금(8만~13만 원)에서 20~3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관행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이다. 노동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는 건설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확대 계획은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켓해야 ‘외국인 범죄’ 적발 건수를 손쉽게 높이는 데 이용될 것이다.

건설 현장의 진정한 범죄는 건설 자본가들이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이 세 시간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데도 산업재해 적용이나 안전 조치 이행도 거부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임금 체불을 밥 먹듯이 자행한다.

사용자들의 진정한 ‘범죄’에 맞서 현장을 변화시켜 온 것은 경찰이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이었다.

건설 노동자들이 이런 투쟁을 벌일 때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건설노조 활동가들은 이미 전국의 많은 건설 현장, 특히 수도권 현장들에 상당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조직을 건설하는 것을 막으려고 자본가들이 대체인력으로 이주노동자를 투입하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서이지만, 또한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이주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것을 ‘현장의 정서’로 고착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설 노동자들이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경기 중서부,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들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연대를 건설한 것은 모범적인 일이었다.

사실 건설노조 토목건축 분야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노조 일부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적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해 왔다. 그러나 잘못된 편견에 맞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한 활동가들이 있었고, 이들의 노력은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주노동자를 미워하는 정서가 퍼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효과를 냈다.

노동계급 연대

그런데 자본가들이 건설노조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해고하는 일이 잦아지고, 비교적 나이가 많은 조합원들은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건설노조 토목건축 분야에서 건설 현장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는 듯하다.

논쟁의 요지는 이주노동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일자리를 놓고 충돌이 벌어지면 (조합원을 고용에서 배제하거나 파업 때 이주노동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불법 취업’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주노동자 ‘추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지는 않되, 문제가 불거진 현장에서는 ‘불법’ 고용을 이유로 사용자를 압박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부분적으로라도 막아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적일지라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내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이는 건설노조 일부 지역에서 어렵게 이주노동자들과 맺어 온 연대의 끈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특히, 경찰과 출입국관리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할 때 노조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사용자들의 ‘불법’ 고용을 문제 삼는 건설 노동자는 자기가 전체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불법 취업’만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하지만, 건설노조 내에 존재해 온 이주노동자 배척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할 것이다. 지금도 건설노조의 일부 지역 지부들 내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추방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출입국관리소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신고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 사용자에 맞설 힘도 약화될 것이다.

옳게도, 2011년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대경지부)는 이주노동자를 배척하지 않고 노조로 조직하기 시작했다. 건설노조 대경지부 이길우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권익 지키기에만 급급해서는 얼마 안 가 조합원들도 고립돼 결국 성과를 도로 빼앗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경지부는 2012년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은 큰 성공을 거뒀고 그 결과 조합원도 늘었다.

이에 맞서 대구경북 지역의 건설 자본가들은 이런 성과를 도로 빼앗기 위해 친사측 노조를 조직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등 대경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찍부터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앞장섰던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도 사용자들의 조합원 고용 배제라는 힘겨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고용불안 압력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연대해 온 훌륭한 활동가들의 일부도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는 듯하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계급 연대의 관점에서 투쟁하는 것이 사용자의 일자리 공격에 맞서는 데 결국 이롭다.

이정원

또다시 제국주의적 전쟁을 시작한

중동 민중을 위한 전쟁?

김종환

9월 22일 시작된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는 수니파 이슬람 단체인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떠든다. 그러나 미국의 폭격 때문에 아이시스가 아닌 많은 평범한 시리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 국제적십자사도 폭격 때문에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처지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라크에서는 친정부 시아파 민병대가 미국의 공습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수니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예배를 보던 수니파 70여 명이 보복 살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아이시스는 자신이 '시아파와 서방이 손잡고 수니파를 학살하는 것에 맞서는 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조차 미국의 공습 이후 아이시스의 인기가 올라갔다고 인정했다.

그 전까지 아이시스와 전투를 벌이던 다른 이슬람주의 세력도 이제 미국의 공습에 맞서기 위해 아이시스와 손잡았다. 미국의 공습이 이라크·시리아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공습하는 진정한 이유는 아이시스의 등장으로 중동에서 자신의 패권을 흔들리는 것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관련국 지배자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모순

미국 : 2003년 이라크를 침공·점령해서 10년 가까이 3조 달러(3천조 원)가량을 퍼부으며 세운 정부가 아이시스의 위협 때문에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아이시스의 성장은 실로 이라크를 수니파·시아파·쿠르드족, 이 셋으로 쪼갤 위험이 있다.

그리 되면 미국은 현 이라크 정부에 대한 통제력뿐 아니라, 중동 지배자들과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다른 열강들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능력도 약해질 것이다. 미국이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오바마는 현재로서는 경제적·정치적 비용이 큰 지상군 투입을 꺼린다. 그 대신 이라크의 정부와 군대를 재정비해서 아이시스를 몰아내려 한다. 그러나 점령 9년 동안에도 하지 못한 일을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 낙관하는 이는 미국 지배계급 안에서도 많지 않다. 미군 내에서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까닭이다.

한편, 오바마는 아이시스를 그 거점

인 시리아에서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시리아는 러시아의 유일한 지중해 군항이 있을 만큼 러시아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곳이다. 그래서 오바마는 미국의 공습으로 아이시스가 약해지면 그 빈 자리를 지금의 친러 성향의 시리아 정권이 채울까 봐 우려한다.

현재 오바마는 시리아 정권 및 아이시스 모두와 대치 중인 온건 반군을 훈련시켜 미 지상군의 대응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리아에는 미국의 기반도, 동맹 세력도 없다는 문제 때문에 전망은 이라크에서보다 더 어둡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 아랍 국가들 : 이들은 지난 여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폭격할 때는 꿈쩍 았다가 미국이 공습에 나서자 즉각 거들 만큼 철저히 친미적이다. 이들은 이란-시리아 정권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친미 아랍 국가들에는 수니파, 이

란-시리아에는 시아파 세력이 집권하고 있어서 종종 종파적 갈등으로 그려지지만, 그 본질은 중동 지역 패권을 놓고 다투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시리아에서 민중 혁명이 시작되자 이를 이용해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일부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시스는 직접 무기와 돈을 지원받거나 다른 반군에 제공된 것을 빼앗음으로써 지금의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아이시스가 자신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세력을 확장하자 미국과 함께 공습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이시스의 빈 자리를 다시 현 시리아 정권이 채울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또, 이 국가들이 미국의 전쟁을 거드는 것은 자국과 아랍 민중의 환멸을 살 수 있다.

시리아 : 시리아 정권은 2011년에 민중이 혁명에 나서자 그들을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 '테러리스트'로 매도했다. 그리고 러시아·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지금까지 19만 명 넘게 살해했다. 또한 시리아 혁명을 분열시키려고 아이시스가 장악한 도시들은 일부러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전기를 공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아이시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자 시리아 정권은 재빨리 환영하면서 미국에게 아이시스와 싸울 때 자

신의 협조를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란 :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수렁에 빠지면서 이란은 이라크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전보다 커졌다. 시리아 정권은 이란의 동맹이다.

아이시스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의 이익과 동맹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란은 아이시스를 무너뜨리길 원한다. 이라크의 친정부 민병대와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ISIS 등장으로 이슬람주의를 오해해선 안 된다

(아이시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주의를 '수구적' 종교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한 손에 코란을, 다른 손에 무기를 들고 시대착오적 율법을 강요하는 광신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주의는 이슬람과 다르다. 이슬람은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믿는 종교이다.(그리스도인 22억 명, 무슬림 16억 명) 반면, 이슬람주의는 이슬람에 대한 특정한 해석에 근거한 정치 운동이다.

이슬람주의는 미국의 '티파티' 같은 개신교 근본주의와도 다르다. 이슬람주의자들이 '예언자[무함마드]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때조차 그들은 전통을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전통의 혼란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대 전통과 현대 사회 양식의 결합이다. 그들을 지칭하는 정확한 표현은 '근본주의'가 아니라 '부흥주의'다.

이슬람주의는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탄생했다. 근대화 전에는 특권이 있었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를 잃을까 두려워한 옛 지배계급, 새로 지배계급이 됐지만 여전히 전통적 지배계급에 견줘 주변부에 있다고 느낀 자본주의적 착취자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왔지만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슬람 사원을 마음의 안식처로 여긴 빈민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이슬람주의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슬람주의를 설명하는 데가

장 중요한 계급 기반은 신(新)중간계급이다. 자본주의적 교육을 받았지만 국가가 낙후해서 미래가 없다고 느낀 지식인들,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제국주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그 전에 있던 여러 운동을 비판하며 이슬람주의를 발전시켰다. 스탈린주의나 제3세계 민족주의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켜 그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외세와 대결하고자 했다.

신(新)중간계급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주의의 기반이 신중간계급이라는 점 때문에 이슬람주의와 파시즘을 동일시하기도 한

다. 그러나 이슬람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을 희생시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깡패 조직이 아니다. 흔히 이들은 제국주의의 대리인 행세를 하기는커녕 중동 전역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을 불안정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슬람주의가 반제국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슬람주의의 일종인 와하브주의를 지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지배계급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기도 하다.

또한 이슬람주의는 제국주의에 극렬히 맞설 때조차 그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인 아랍 자본가들이 '이슬람'을 기치로 내걸면 이들을 용인하곤 한다.

이슬람주의 운동이 제국주의와만

싸우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나 종파, 세속주의, 여성과 성 소수자들, 소수 인종, 좌파들과도 싸운다.

아이시스는 아사드 정부군과 맞서기도 했지만 시리아 혁명 세력들과도 맞섰다. 30여 년 전 이란 혁명 때도 이슬람주의자들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며 반제국주의 투사로 떠올랐지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좌파를 탄압하고 소라*를 공격했다. 그들이 건설한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반노동자적인 독재 체제였다.

이슬람주의자들이 여러 계급으로 나뉘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주의자는 기존 지배자들과 타협해 억압과 착취를 이데올로

오바마

미국이야말로 중동의 발암물질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란·시리아·이라크 등지의 지배계급들은 이처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이라크·시리아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적대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아이시스는 반제국주의를 표방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운동에도 적대적이다.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시스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혁명가들이 독재 정권과 싸우다 죽은 이의 열 배에 달한다. 이라크에서도 아이시스는 시아파 사원을 폭파하는 등 종파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오바마는 이런 아이시스를 “암 덩어리”에 비유했다. 하지만 아이시스를 낳은 ‘1급 발암물질’은 바로 미

국의 이라크 점령이었다. 오히려 이라크 민중은 아이시스 같은 세력의 부상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이 수립한 것과 다름없는 이라크 정부가 이를 탄압했다.

미국은 시리아인들이 독재자에게 학살당하는 것에도 진정으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올해 초 미국은 시리아 혁명 진영한테 정권 퇴진을 요구하지 말고 연립정부 구성 같은 ‘정치적 해법’을 수용하라고 으박질렀다. 이제 와서 미국이 온건 반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리아에서 아이시스를 물리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우거나 적어도 그런 압력을 행사할 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아이시스를 키웠다.

제국주의 질서 전체에 반대해야 한다

미국이 공습을 중단하고 손 떼는 것이야말로 중동 민중을 위한 것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목숨을 잃은 이라크인들만 1백8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그동안 미국이 중동에서 저지른 해악은 아이시스보다 비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운동 내 스탈린주의자들은 미국이 공습을 개시하면서 시리아 정권의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나 유엔 안보리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 미국 제국주의에는 반대하지만 시리아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 제국주의(안보리의 일원이다)를 진보적이라 여기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는 제국주의를 단지 미국의 횡포만으로 여기지 않고 경쟁하는 열강들의

국제적 시스템으로 본다. 그 속에서 시리아와 러시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미국과 거래할 세력들이고 과거에도 실제로 그랬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는 아래

로부터의 운동을 제국주의에 반대할 진정한 동력으로 본다. 자국에서 잔혹한 독재를 일삼는 시리아의 아사드와 러시아의 푸틴은 진정으로 반제국주의적일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전쟁 지원 말라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공습에 ‘인도주의적 지원’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지원도 미국의 전쟁을 정치적으로 돕는 것이다. 오바마는 수십 개 국가가 공습을 지지한다고 강변하는데 여기에는 ‘인도주의적’ 지원국들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현지의 친제국주의 세력

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음을 꾸준히 내비치고 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군사적 지원을 앞둔 포석일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기적으로 정당화하기도 하고, 기존 지배자들을 거슬러 소수의 무장 행동을 벌이기도 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한다.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 같은 일부 이슬람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한 구실을 한다.

구실

아무튼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가 낳는 폐해와 제국주의 전쟁이 조장한 끔찍한 갈등의 주된 원인이 이슬람주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주의를 근절시킨다 해도 빈곤, 고통, 박해, 인권 억압을 없앨 수 없다.

물론 ‘적의 적은 친구’라는 진영 논리로 이슬람주의 운동을 ‘진보적

반제국주의’ 운동처럼 추켜세워서도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는 그들이 제국주의와 대결할지라도 흔히 친자본주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슬람주의 운동이 활동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운동이 수행하는 기능을 분석한 뒤 적합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김준호

쇼라

1978년 이란 노동자들이 혁명 와중에 건설한 민주적 권력 기관.

추천 소책자



이슬람주의, 계급, 혁명
크리스 하먼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문고판, 4,900원, 128쪽

중국 군함의 걸프만 군사훈련 제국주의적 경쟁의 각축장이 돼 가는 중동

9월 20일 중국 군함 2척이 이란의 군항 반다르 아바스를 방문했다. 이란 해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해군이 걸프만에 진입해 군사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걸프만은 중동 석유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미국은 제5함대를 상시 주둔시켜 왔다. 그런데 바로 이곳까지 중국 해군이 진출한 것이다.

수니파 이슬람 단체인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의 부상으로 미국이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훈련은 미국의 중동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되고 있다.

중국도 중동에 상당한 지정학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 특히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4년 현재 중국은 원유 사용량의 60퍼센트가량을 해외에서 수입한다.(표1)

그중에서도 중동산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중국은 이라크 유전 개발의 최대 투자국이다. 중국 국영 석유천연가스공사는 지난해 이라크에서 원유 2억 9천9백만 배럴을 생산했다. 이는 중국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전체 원유량의 거의 3분의 1수준이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제치고 걸프만 석유 부국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이 때문에 중국 지배자들은 중동에서 안정적인 원유 수입과 투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크다.

그러나 중국이 중동에 직접 군사 개입을 하는 데는 제약이 많았다. 미국이 중동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 이곳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중국

은 자국에서 중동으로 오는 길목에 확실한 동맹과 군사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이 약점을 극복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 지배자들은 중동의 정치 지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도 했다. 2011년 중국은 아랍 혁명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금도 중국은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를 지지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아이시스 공격을 지지한다.

신(新)실크로드

그러나 중국 지배자들은 중동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세력을 키우려 한다. 시진핑 정부는 최근 “신(新)실크로드 경제권”을 강조하며, 중국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해상 루트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미국을 비롯해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동에서 벌인 일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따라서 중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중동의 안정이나 평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특히, 스탈린주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은 좌파들이 냉전기 진영 논리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침묵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스탈린주의자는 아니지만 스탈린주의 전통과 때때로 타협하는 슬라보예 지젝은 2008년 중국의 티베트 통치가 티베트 민중에게 좋은 일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전쟁을 일관되게 반대하면서도,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나, 아사드를 지지하는 중국(비록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제국주의일지라도)에 대해 어떠한 착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중동에서 제국주의 세력을 패퇴시킬 유일한 대안이다.

김영익

표1) 중국의 석유 수입의존도 (단위: %)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2000	2005	2010	2020
수입의존도	1.9	5.4	8.1	17.0	15.4	30.0	35.7	52.1	70.0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0
※ 2020년 통계는 IEA의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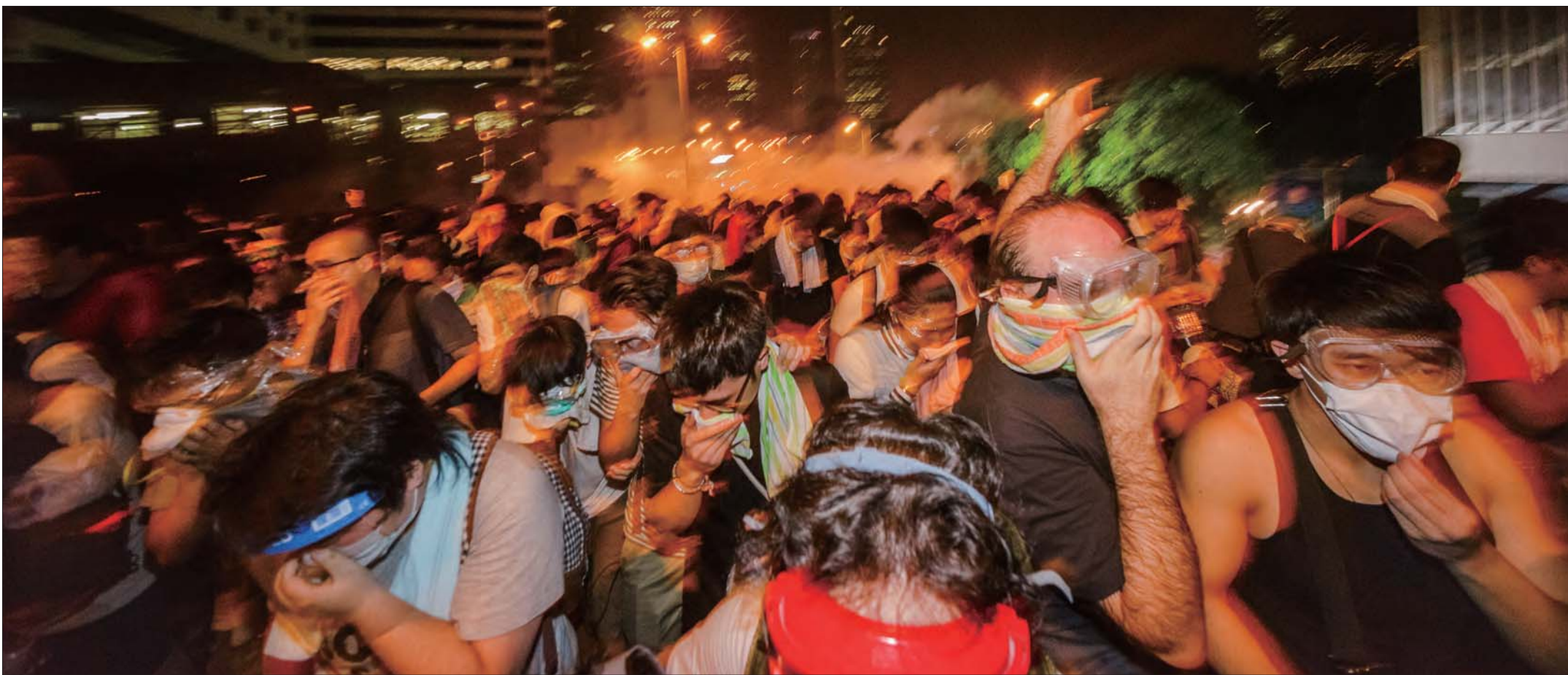


사진 출처 Leung Ching Yau Alex (불리커)

9월 28일 홍콩 센트럴에 모인 시위 참가자들 경찰이 쏜 최루탄 때문에 마스크와 고글을 썼다.

홍콩

수만 명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도심을 점거하다

김영익

9월 28일 홍콩의 금융 중심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커다란 함성으로 가득 찼다. 홍콩 시민 수만 명이 홍콩 행정장관(시장) 선거의 온전한 피선거권을 요구하며, 주요 금융기관과 홍콩 행정청이 있는 센트럴과 시내 곳곳을 점거했다.

이미 9월 22일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동맹 휴업과 시위를 벌여 왔는데, 이것이 점거 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홍콩 경찰은 강경 진압에 나섰다. 점거 시위자들에 최루탄을 쏘았다. 홍콩에서 최루탄이 등장한 것은 2005년 WTO 각료회담 반대 시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중심이 된 참가자들은 강경 진압에 부딪혀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한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점거 규모는 더욱 커졌다.

지금 경찰의 폭력 진압과 이에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의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1989년 톈안먼 항쟁이 연상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주의

그동안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의 염원을 짓눌러 왔다. 1997년 홍콩 반환 때 중국 정부는 광범한 자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공문구에 그쳤다.

그래서 2000년대 내내 홍콩에서 행정장관과 입법회(의의회) 직선제를 요구하는 운동이 있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2017년 행정장관 선거를 직선

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후보추천위원 1천 2백 명 중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 2~3명에게만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보통선거 안'을 의결했다. 후보추천위원들은 친중국 성향이 압도 다수이므로, 사실상 친중 인사만이 출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공정 선거가 본토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다. 본토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게 분명하고, 무엇보다 티베트와 신장 같은 소수민족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홍콩이 두바이처럼 민주주의는 없고 그저 본토로 유입되는 해외 투자와 금융을 위한 '자본 천국'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평범한 홍콩 시민들, 특히 젊은 노동자와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원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에서는 민주주의 운동이 끊임없이 벌어져 왔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 2003년 중국 정부가 홍콩판 테러방지법인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50만 명이 항의 시위를 벌여 좌절시켰다. 2012년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국민교육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려 했을 때도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철회시켰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통제에 대한 반감과 함께 사회 불평등도 자리잡고 있다.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고, 간신히 취업해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부동산 가격이 세계에서 둘째로 비싼 도시에서 적은 임금으로 살아가기란 너무 힘들다.

사회적 배경

홍콩은 2010년까지 최저임금제도 없었다.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복지 제도도 형편없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용자 학대 속에 일한다. 그래서 마천루가 즐비한 홍콩에서 20퍼센트가량의 시민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

반면 홍콩의 소수 경제·정치 엘리트들은 중국 경제와의 통합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어 왔다. 부와 특권의 독점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정실 자본주의 지수"에

서 홍콩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에는 심각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염원이 깔려 있다.

홍콩의 대자본가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중국 정부를 지지하며 민주화 운동을 반대한다. 홍콩상공회의소 의장은 민주화 운동이 "홍콩의 사회 질서와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와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들은 홍콩의 운동을 지지하는 척한다. 그러나 홍콩을 식민 통치했던 영국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것은 위선이다. 아랍 민중을 학살하는 오바마가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을 압박할 기회라고 봤기 때문이다. 서방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중국 본토의 노동자들

에게 영향을 줄지 모를 이 운동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홍콩의 점거 운동이 국내외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자, 중국 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물론 중국 지배자들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홍콩 관련 소식이 본토에 퍼지지 않게 모든 보도와 SNS를 검열·차단하고 있다. 여러 소수민족을 식민 통치하고 본토 노동자·농민을 권위주의적으로 억누르는 중국 지배 관료의 처지에서 볼 때, 홍콩에서의 '양보'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10월 1일 이후 시위를 도시 전체로 확대하거나 행정 부서를 점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9월 29일 코카콜라 현지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고, 교사를 비롯한 일부 노조도 파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식 '사회주의'는 가짜다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 요구를 억압한다. 최근 시진핑 정부가 마르크스주의를 강조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전통을 내세우지만, 자기 대표를 선출할 권리도 부정하는 사회가 무슨 사회주의란 말인가.

1949년에 건설된 신(新)중국인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 오늘날에도 중국 국가 관료

들은 주요 경제 부문을 통제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군사대국이다. 제국주의 국가로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열강들과 치열하게 지정학적 경쟁을 벌인다. 또한 티베트와 신장 등을 식민 통치하며, 독립이나 자치를 요구하는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유혈 진압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본질을 이해하고, 중국 제국주의에 대해 어떠한 착각도 해서는 안 된다. (가령, 박노자 교수처럼 중국을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준주변부 대국"쯤으로 규정하면, 진영 논리에 뒤통을 얻어 주게 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